이용섭 광주시장 공직후보자 임명 논란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임명 강행
횡령 · 배임 등 의혹 자의적 해석으로 문제 없음
시민사회단체 후보자 고발 검토…후폭풍 우려

이용섭 광주시장이 21일 횡령·배임의혹이 제기된 김강열(58)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이 시장의 임명 강행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 제시했던 공공기관장의 3대 자격요건인 업무 전문성, 리더십, 방향성을 기본에 두고 의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 지역사회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광주시의 인사특위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적절한 후보자라고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의회가 '부적격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후보자가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령한 금전 등 도덕성 문제는 아쉽지만 모 법무법인은 적법한 수령이라는 법률적 의견을 내놓았다"며 "김 후보자가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광주발전에 헌신할 기회를 주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결정에는 지난해 말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에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낙점했다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후 공단 업무공백이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의회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지역사회 민심과도 동떨어진 인식으로 인사권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인사특위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경영능력에 흠결이 크다며 이 시장을 만나 내정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김 후보자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시민단체 활동 당시 급여를 받은 것은 정관을 위반해 횡령과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는 데도, 이 시장이 '적법한 수령'이라는 긍정적 의견만을 취사선택하는 것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목이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김 후보자의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수사가 개시될 경우 업무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산하 기관장 인사를 구체적인 확인 절차나 근거 없이 캠프인사나 보은인사로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선거 때 시장을 도왔거나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관장 인사를 비판하고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시장이 지난해 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정상용(70) 전 국회의원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다가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경영능력 부족, 아들 병역기피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했던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 3명 중 꼴찌인 3위였으나, 면접심사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아 사전 내정설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시장은 "타 지역 활동가를 임명하면 평가가 대체적으로 너그러운 반면 우리 지역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흠잡고 비판하면 지역인재가 육성될 수 없다"며 "시민이 맡겨주신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반드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으로 보답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의 임명 강행은 예견됐다는 평가도 있다.

인사청문회가 광주시와 의회간 업무협약으로 도입돼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장과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데다 일부 의원들은 친불친에 따라 청문회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법적인 견제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은홍 기자

제주 해녀가 전달하는 독립의 횃불 21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연북정 일대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의 횃불 릴레이' 행사가 열린 가운데 해녀들이 횃불을 전달하기 위해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곡성 농공단지 보조금 비리…군, 사업자 무더기 검찰 고발

보조금으로 사업부지를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다시 사업자금을 대출한 민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곡성군은 21일 운곡특화농공단지 민간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A사와 보조금 수령 당시 해당 SPC 참여 주주 5개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형법상 사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광주검찰청에 고발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해당 사업자는 곡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6억5000만원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2017년 3월 17억5000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불법 마련한 자금 44억원 가운데 수억원은 규정에도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수령 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곡성군에 보증 효력이 없는 보증서를 제출해 사문서를 부정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거액의 돈이 지급되는 등 부당한 행정행위가 이뤄진 점에 주목,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이 농공단지는 18만2000㎡ 규모로 곡성군은 지난 2014년부터 단지조성에 착수했다. 그러나 위탁 사업자 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은 토지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적잖은 역할을 미칠 것을 우려해 사업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1군 종합건설업체 B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유효한 보증서도 확보했다.

또 기존 SPC에 참여한 주주회사들은 전면 배제하고 사업시행자를 재구성할 것을 B사에 요구한 상태다.

곡성=김광휘 기자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40대 검거

광주 광산경찰서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 등)로 정모(4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모 아파트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A(60·여)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2%(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달아나 15km 가량 떨어진 제2순환도로 풍암IC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같은날 오후 11시47분께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숨진 A씨의 것으로 보이는 손가방이 차량에 끼어있던 점 등을 토대로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씨는 경찰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차를 몰았고 사고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택 기자

납품 대가 뒷돈 챙긴 국가기록원 직원 구속

장비 납품과 공공기록물 유출 등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국가기록원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직원 A(48)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44)씨 등 장비납품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12월 B씨 등으로부터 스캐너, 컴퓨터 등 각종 장비의 수리와 구입 비용을 시세보다 2~4배 가량 부풀려 공급하도록 하고, 8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부산기록관에 보관 중인 공공기록물 스캔파일을 업체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계약 및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용차 바다에 추락 30대 운전자 숨져

21일 오전 10시 34분께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여차항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 류모(36)씨가 숨졌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4분께 지나가던 선박 A호 선장 김씨가 "여차항에 차량이 추락하였다"고 통영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구조대, 경비정, 거제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신속히 보내 차량운전자를 구조했다.

류씨는 대기 중인 119구조대에 인계돼 인근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사찰 돌며 86차례 불전함 턴 50대 구속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경기도 일대 사찰을 돌며 불전함을 턴 이모(5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용인 등 경기지역 19곳에서 86차례에 걸쳐 불전함을 털어 2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인적이 드문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대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에 젓가락 등을 이용해 현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 들고 배회한 40대, 테이저건 쏴 검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1일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께 "아들이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산 해운대구 집 주변을 수색하다 A씨를 발견,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A씨가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했다.

경찰은 수 차례 경고에 불구하고 A씨가 흉기를 버리지 않자 테이저건을 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